

정책기관

Trouble 대책 'Slitter·Winder의 기초와 권취 제어기술'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개인컨설턴트로 슬리터 전문가이다.

이번 강연은 슬리터의 분류, 슬리터의 기계구성, 슬리터 앞 장치, 슬리팅 기술, 권취구동(장력), 권취 접압방식과 제어, 권취축수, 권취 제품의 품질과 검사, 재료두께의 표현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은 이번 달 29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한국포장기술연구소로 하면 된다. 전화 : 02)2026-8166

정부 지식서비스 산업 신성장동력 선정 패키징(포장), 물류 등

정부의 '신(新)성장동력' 발굴사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후보에 디자인, 컨설팅 등 11건이 선정됐다.

지경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지식서비스분과(위원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는 지난 달 9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신성장동력 발굴 분과 토론회'를 열어 디자인, 패션, 패키징(포장), 소프트웨어, 컨설팅, 엔지니어링, 이터닝, 물류, 의료서비스, 시험·인증, 전시 등 11개 분야를 신성장동력 후보로 제시했다.

지식서비스분과는 "성장성과 고용효과, 다른 산업에 대한 기여도, 경쟁력, 미래지향성 등 5개 기준을 토대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인 지식서비스산업의 최종 신성장동력은 오는 9월 각계 의견 수렴과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된다.

오상봉 위원장은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자체의 성장외에도 양질의 고용창출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서비스팀장은 "선진국의 경우 산업의 부가가치 핵심 분야가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발굴은 지식서비스산업과 첨단소재, 수송, 기계·항공 등 주력 기간산업, 융합, 로봇, 나노 등 신산업, 그린오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환경산업 등 4개 분과로 나뉘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RFID/USN 기업에 6천6백억원 투자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기대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RFID/USN 산업이 자동차, 의료, 건설, 유통·물류 등 소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며, 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가치사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지난 달 17일 팔래스 호텔에서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FID/USN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 발표회”를 개최하고, 향후 「2017년 RFID/USN산업 세계 3강 실현」을 목표로 RFID/USN산업의 선도적 시장수요 창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발전 기반 고도화를 골자로 하는 “RFID/USN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로 지식경제부는 RFID/USN산업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시장 및 기술 선점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도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적용 사례가 부족하고, 높은 초기비용으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성공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전략분야를 선정해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 조달물품, 지자체 시설물, 우편 소포 등 3대 유망 공공분야에 RFID를 우선 도입하여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신규도입 물품에도 RFID 부착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약, 항공기 부품을 시작으로 전 군수물자에 RFID 적용도시 시설물과 옥외 광고물, 소방물품 등 지자체 시설물에 RFID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부와 공동으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우·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도 RFID 본격 적용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관 공동으로 자동차, 섬유 가전, 유통·물류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해 대표 적용모델별 확산사업을 추진(연 4~6개)해 대규모 RFID 수요를 촉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도입 초기단계인 USN 분야에서

는 에너지 절감, 환경 모니터링, 문화재 관리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시범사업으로 USN의 초기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도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RFID/USN 장비 리스” 서비스를 활성화해 수요기업들이 소규모 투자로 RFID/USN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창출 지원을 위해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주요 분야에 RFID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초기 비용 부담 경감 및 도입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 세무조사 완화, 행정처분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정부는 적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미래 기술경쟁에 대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인식을 개선, 저가(5센트 이하 태그 등) 솔루션 상용화 등 현장 응용기술 개발과 차세대 RFID, USN 요소기술, 융합기술 등 RFID/USN 3대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5년간 총 2천5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RFID/USN 국가표준을 07년 43종에서 12년까지 총 1백30종으로 확대, RFID/USN의 국내외 표준을 선점하고 특허 멘토링 서비스 및 특허 풀 조성 등을 통해 선진국의 특허 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RFID/USN 산업발전 기반의 고도화를 위해, 인천 송도를 RFID/USN 연구개발에서 제품화 전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RFID/USN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협소한 국내 시장과 경쟁격화로 적정이윤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인 RFID/USN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사업 추진 시 RFID/USN 장비 분리발주,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참여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전시회 참가 및 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금번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RFID/USN분야 산업생산은 07년 5천6백억원 규모에서 12년에는 9조 2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대되고, 약 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RFID/USN 산업이 2012년 전체 GDP에서 약 0.49%를 차지하며, 타 산업분야에 대한 간접 파급효과는 2012년 약 9조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이동근 실장은 “조선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국가·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FID/USN을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고, “수요·공급기업의 상생 협력과 대학·연구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협약 체결
 그린마일리지 제도 운영

환경부(장관 이만희)는 지난 달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주요 24개 업체 간에 불필요한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자발적 협약은 5월 30일 ‘건강/미용제품’에 이은 두 번째 협약으로 그 간 필요한 포장으로 인식되어온 판촉용 포장재를 업계 스스로 줄여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는 총 24개사로 스낵·캔류(참치/햄 등) 등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농심 등 13개 제조사와 1차 협약 유통업체(6개사) 및 한화갤러리아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등 11개 유통사이다.

이번 협약 체결 후 시행될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건강/미용제품’과 동일하게 ‘식품’의 판촉용 포장재를 사업 첫 해인 금년에는 ‘07년 대비 30% 이상을 저감한 후, 4년간 매년 10% 이상씩 추가로 줄여 2012년까지 총 80% 이상을 줄이는 ‘30-80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소요된 제비용의 절감분을 유통업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유통업체에서 판촉용 팩 제품 구입시 적용되는 기존의 가격 할인 이외에 추가로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고객은 제품 구입시 동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포장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대상 제품에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포장 재질 등을 표시할 계획이다.

‘건강/미용제품’과 함께 금번에 체결되는 ‘식품군’의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연간 약 6천3백톤(’06년 기준)에 달하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억

제와 기업의 포장비용('06년 기준, 약 8백40억 원)의 절감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강/미용제품'에 대한 약 1개월간의 협약 이행실적 분석결과 협약기업, 민간단체 및 언론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에 힘입어 소비자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약 이행 초기임에도 동 제품을 제조하는 12개 업체의 지난 1개월간 판촉용 포장재 감축량이 목표치(약 1백3톤)를 초과한 약 1백13톤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관련기업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발적 협약이 다른 제품으로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동 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이력추적제도 추진
영유아용 이유식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남양유업의 “명품유기농”외 11개 제품과 매일유업의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외

11개 제품 총 24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시범사업은 생산단계에서 전자식별태그(RFID)를 부착, 원재료 정보 등 생산이력정보와 물류·유통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토록 식품이력추적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식품업체의 영세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식품이력추적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우리청이 주도적으로 식품안전확보 및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식약청은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이력추적제도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김스클럽,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도 시범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형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력추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매장 7곳에 스마트선반을 설치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력정보와 위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식품이력정보를 한 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공급차단, 회수·폐기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금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

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건강에 파급효과가 큰 식품부터 이력추적 시범사업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2013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로 다른 포장 원제품시험 각 실시
 포장일자 등 동일시 무균시험 제외

1개의 제조단위를 서로 다른 포장단위 또는 여러 종류의 포장형태로 제조할 경우 포장일자, 형태 또 기시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 항목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식약청 의약품품질과는 최근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된 완제의약품 시험생략 관련문의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 놓았다.

의약품품질과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차례 사이버 민원을 통해 질의된 '동일한 로트에서 충전용량만 다른 경우 용량별로 전 항목 시험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식약청은 기본적으로 서브제조단위별로 각각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1개의 제조단위를 10정과 1백정, 1백mL와 2백mL 또는 병 포장, 블러스트 포장 등 여러 종류의 포장형태로 제조하는 경우 추적이 가능한 서브제조단위를 부여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업계의 편의를 도모코자 포장공정에 대한 밸리테이션을 실시하고, 포장일자, 포장 형태 그리고 기준 및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

우에는 무균시험을 제외한 전 항목 시험을 실시하지 않다고 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또한 '함량시험 시 확인시험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에는 함량시험으로 확인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라 함은 함량시험에서 확인되는 물질과 확인시험 항목별로 확인되는 물질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는 모든 제품에 대해 완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타당하나 업계의 인적, 물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예외적 사항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의약품 관리는 계속해 선진화 세분화되는 만큼 업계도 함께 보조를 맞춰 선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광주디자인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국가 색채표준 활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지난 달 9일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와 디자인산업 발전과 색채표준정보의 공동 활용 및 색채·디자인 산업 기술개발 등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술표

준원의 색채표준 정보를 활용해 기술표준과 디자인을 통한 국민의 편의향상과 안전한 환경조성 및 색채·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03년도부터 색채관련 KS 정비를 시작으로 한국표준색표집, 한국표준색이름 통합본, 표준색이름 디지털팔레트 등을 제작·보급하는 등 국가 색채표준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07년도에 "색동코리아"라는 로고를 선정하여 국가 색채표준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 3월 지식경제부, 광주시의 지원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는 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지역공공디자인개선사업, 향토 자원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술표준원과 광주디자인센터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가 색채표준의 확산 및 색채·디자인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개선안 예고
퇴장방지의약품 및 저가의약품 제외

50원 이하 저가약과 퇴장방지의약품이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소포장 의무화를 생산량 기준에서 재고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이 지난 달 9일 입안예고됐다.

입안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은 소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청(청장 윤여표)은 제약회사들이 50원 이하의 저가약 및 퇴장방지의약품을 소포장 단위로 생산할 경우 제조원가가 상당액 증가, 수익성 악화로 생산이 중단될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소포장단위 품목 공급량은 기 생산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규정에서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원 등에 공급하도록 돼 있었으나 수요가 없는 품목까지 일괄 10% 이상을 제조·수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초래, 개선안이 마련됐다.

특히 개선안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소포장 품목 생산(수입)량, 공급도매업소명 등의 자료를 분기별로 관련 단체 장에게 제출하고, 관련단체 장은 이를 업무 관련자에 한해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서 '30정·캡슐'로 고정돼 있던 포장 단위를 '30정·캡슐 이하'로 조정했으며, 실적자료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부당한 재고 방지 및 유통 활성화를 촉진코자 함"이라고 설명했다.